"세종시 수정땐 혁신도시도 위태"

민주 충북서 '원안 사수' 장외 총력전

'4대 불가론' 내세워 과학비즈벨트 비판

민주당은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주장하는 등 현 정권의 세종시 축소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원군 오송 생명과학·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방문,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지 일대를 둘러봤다. 그는 이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당의 세종시 축소 저지 방침을 설명한 뒤 성안길 입구로 이동, 충북도당이 개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400여명의 당원·주민 등이 참석한 국민대회에는 당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대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충북의 홍재형 이시종 오제세 정범구 의원, 충남의 박병석 양승조 의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등도 함께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와 쌍둥이이자 형제"라며 "행복도시가 백지화되면 혁신도시도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부2처2청이 빠진 변형된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백지화"라며 "행복도시에 더 보태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탠다는 것은 바꾼다는 말이다. 원안 추진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시종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약속 파기'로 규정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 '핫바지보다 심한 욕'이라고 비판한 뒤 "세종시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대통령직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3일과 8일 각각 천안과 대전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참석한 뒤 활동 반경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넓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기로 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4대 불가론'을 내세워 반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법적 행태 ▲과학계의 반발 ▲불분명한 논거와 반복되는 거짓말 ▲다른 혁신·기업 도시의 피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과학벨트법이 국회에 계류돼 8개 도시를 후보지로 놓고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8개 후보지 가운데 세종시는 6위에 해당되는데 대통령 말대로 (세종시를) 찍어서 추진하면 법과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만으로는 그 자체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대안을 '망국도시'로 규정하고 전국의 권역별 혁신·기업도시 추진현황과 정운찬 총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 개념 정의를 바꾼 발언록을 담은 차트 자료도 제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뻥튀기 정권의 뻥튀기 벨트"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국책사업을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으로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오후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세종시 원안사수 국민대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원안 사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언급없이 인삿말만 …

이대통령-박근혜 만찬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후 방한 중인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은 지난 9월 '청와대 독대' 이후 2개월여 만으로, 최근 정치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외교 의전행사인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예상대로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가벼운 인사말만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박 전 대표가 손을 내밀어 인사하자 악수하며 환한 얼굴로 "(한. 헝가리) 정상회담에서 (박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고 인사말을 건넸으며, 박 전 대표는 "네, 네"라고 대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오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으나 외교행사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 박 전 대표가 초청된 것은 지난 8월 헝가리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데 따른 것으로,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한·헝가리 의원협회 회장 자격으로 초청됐다.

박근혜, 세종시 관철 테러 위협 무대응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입장 수정을 요구하는 테러 위협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주목된다.

1일 경찰과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수정안에 계속 반대하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배달돼 박 전 대표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테러 위협에 대해 대응 자체를 삼가고 있다. 수사 의뢰도 박 전 대표의 지시가 아니라 보좌진 선에서 조용히 이뤄졌으며, 사건이 공개된 것도 경찰 측을 통해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단순한 형사 사건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되길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박 전 대표가 거듭 세종시 수정반대를 밝혔고 이러한 입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걸 원치않는다는 기류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친박계에 연대 제안했다 퇴짜

정세균 대표 체면 구겼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세종시 논란과 관련, 친박(친 박근혜)계와 연대를 거론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연대의 대상인 친박계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무위로 끝나도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기존에 공조를 많이 한 야당뿐 아니라 사안별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여기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건 일종의 승부수였다.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

우선 당내에 반발이 있다. 서로 정체성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친박과의 연대는 세종시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들도 상당하다.

특히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다.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당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별스러운 얘기를 다 듣는다"라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1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연대나 정략적 고려 없이 우리 당 차원의 '원칙'대로 나갈 것"이라며 "정 대표가 제안한 야권의 정책연대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 때문에 정 대표는 이날 한발 물러나 '이심전심 연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꺼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선 민주당이 앞장서고 여러 정파와 힘을 합치는 '원안 사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이심전심 연대'라고 작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당과 친박연대, 한나라당 내 원안 사수파와도 협력해야 하는데 내놓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다"며 "내놓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심전심 연대'를 통해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 법안을 내놓았을 때 확실히 부결시키겠다. '이심전심 연대'가 원안 사수의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느슨한 관계의 연대, 국회 내 표결에 의한 연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의원직 사퇴 3인방 국회 의장실 점거 농성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해 지난 7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1일 국회의장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해 항의한 뒤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의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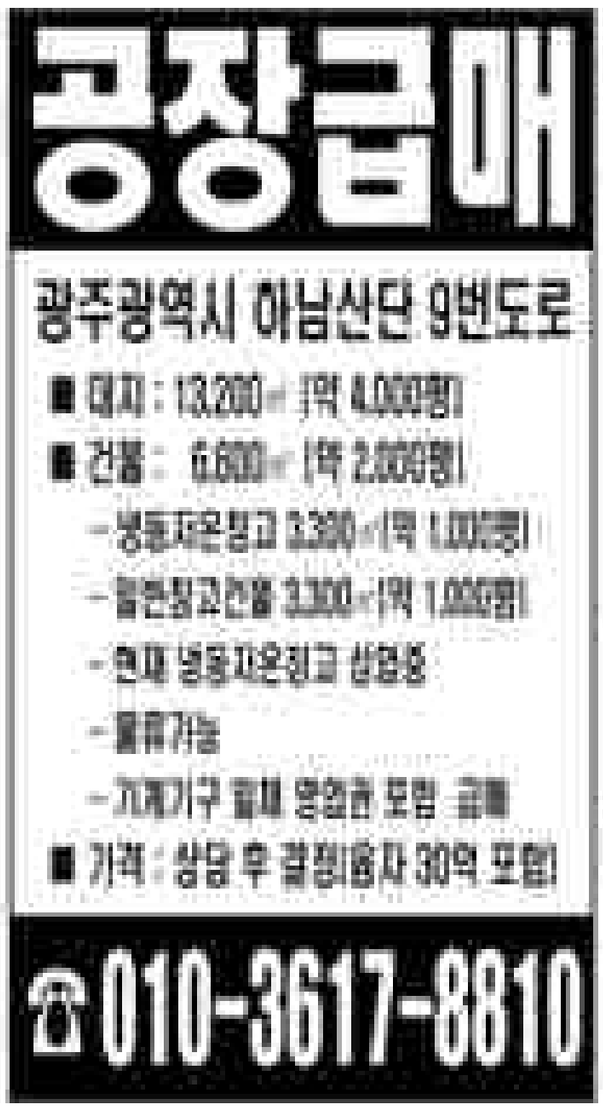
F1·CT연구원 예산 확보

조영택 의원 '고군분투'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F1 경기장 건설 사업비와 CT 연구원 설립 예산이 국회 문방위에서 되살아난 배경에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의 '고군분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방위 예결소위 위원인 조 의원은 F1 경기장 예산과 관련, 소위에 참석한 문광부 관계자들에게 예산 반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하는 한편, 한나라당 위원들에게는 정부와 여당의 신뢰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결국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에게 광주 CT 연구원 설립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버텨, 뜻을 관철했다.

여기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공정률로는 성공적인 전당 건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 2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특히, 조 의원은 문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입원으로 자리를 비우자 위원장직을 대행하면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 기대 이상의 지역 예산 확보를 현실화시켰다. /임동욱기자 tuim@